'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활력 전략' 방안 모색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전북특자도 · 디지털 거버넌스 등 10개 분과에서 22개 주제발표 · 토론 진행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난 19~20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활력 전략'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는 지난 19~20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활력 전략'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전북도의 후원을 받아 전북연구원, 한국비교정부학회 등과 공동 진행했다.

학술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갈등과 지역사회, 고향사랑기부제, 외국인력과 고령사회, 지역 문화 관광 등 10개 분과에서 2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20일 제2분과와 제3분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섹션'을 주제로 2개의 섹션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기획섹션(좌장 정광호 서울대)에서는 미국의 분주 사례가 경기북부 분도에 주는 정책사례(강인호 조선대, 조성호 경기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권 특례 논리의 방향(임성진 전주대, 이병현 김제시의회)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기획섹션(좌장 송건섭 대구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인사권 혁신방안(황성원 군산대)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균형발전 혁신방안(김우석 전북도의회)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디지털 거버넌스(좌장 이상엽 건국대)에서는 디지털 트윈 정부의 성공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준형 순천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제도적 쟁점에 대한 고찰(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재정 책임성과 재정위험 진단제도(윤성일 강원대)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안국찬 전북대 대외·취업 부총장은 양오봉 총장을 대신해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시작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실천적인 과제들이 논의되고, 의미있는 성과까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아 회장(전북대 행정학과)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공공기관 및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재일전북도민회장 및 회원들을 초청해 '전라북도 테마답사'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재일전북도민회가 김관영 도지사를 만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일전북도민회 '전북 테마답사'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재일전북도민회 초청

전주 · 고창 일원에서 전북의 매력 홍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재일전북도민회장 및 회원들을 초청해 '전라북도 테마답사'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재일전북도민회 천현사 회장 및 회원들을 초청해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테마답사와 재일전북도민회가 1975년부터 진행한 벚꽃나무 기증 식수행사를 가졌다.

전북출신들로 구성된 재일전북도민회는 1975년 전주~군산 벚꽃나무 기증행사를 시작으로 전북 도내 시.군에 꾸준히 벚꽃나무 기증 식수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고창군에 벚꽃나무를 기증했으며 21일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식수 및 표지석 제막행사를 가졌다.

이에 앞서 재일도민회는 19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벚꽃나무 기증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고향인 전북발전을 기원했다.

김 지사는 "재일전북도민회는 전 군가도 벚꽃 기증을 비롯해 덕진공원 조성 등 전북발전에 꾸준히 지원을 해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재일전북도민회 60주년을 맞아 보다 원대한 발전과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도시인 고창군의 대표 향토축제인 모양성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도 경험했다.

전북도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테마답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도 답례품을 소개했다. 전북의 14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체험답례품, 농·축·수산물 답례품, 가공식품 답례품 등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을 선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격 돌입

이달 설계용역 마무리… 내달부터 모두베기 ·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로 추가확산 저지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이 줄어드는 10월부터 가을철 방제사업에 전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제사업 추진에 앞서 5월부터 9월까지 도·시군,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정밀예찰(지상, 드론)을 실시하고 시·군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해 10월말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11월부터는 고사목을 제거를 포함한 본격적인 방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방제사업은 고사목 제거뿐만 아니라 감염목 주변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소구역모두베기와 예방나무주사를 함께 실시하는 복합방제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38만본에서 107만본으로 2.8배 증가했으나, 전북도는 적극적인 방제사업 추진을 통해 2,110본에서 2,575본으로 1.2배 소폭 증가한데 그쳤고, 하반기 방제사업도 설계단계부터 모두베기 등 적극적인 방제방법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추진 기세를 바탕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부안군의 청정지역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예찰과 대응 조치를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함께 협력해 전북의 소나무림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대규모 행사장, 생물테러 감시 강화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행사장 공기포집 · 생물테러 감염병 검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20일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게 생물테러 감시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생물테러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었지만, 코로나19 등급조정 및 방역완화로 대규모 행사 및 지역축제가 재개돼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생물테러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올해 대규모 행사장을 방문해 공기포집을 하고 고위험병원체 6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새만금 잼버리대회, 아·태마스터즈대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임실치즈축제 5곳의 행사장을 방문해 감시를 수행했으며 아직까지 생물테러 의심정황이나 병원체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로 생물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는 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 유비저균, 브루셀라균, 두창바이러스 등이다.

앞으로도 도내 주요 행사장을 추가로 방문해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며, 혹시 생물테러 병원체가 검출되는 경우 행사 주최 및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처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31일까지 가을철 불법어업 단속

전북도는 2023년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한달 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도와 수협, 한국수자원공단,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4여명이 투입되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우리 도, 시·군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 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김재훈 기자

'출산모 대상, 산후 지원비 신청하세요'

최대 20만원 지급

전북도가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관할 시·군 보건소로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 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이며,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14개 시군 현장 모니터링 및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의 산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김재훈 기자